선거 결과따라 주류-비주류 난타전 예고

■ 재보선 이후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방식 갈등속 당권구도 요동 가능성

박주선·김효석 본격 당권 도전 행보 나설 듯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와 9월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놓고 민주당 주류-비주류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재보궐 선거 영향력**=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패배로 나타날 경우, 후보 공천과 선거 전략을 주도한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모인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신연대 등 비주류 세력은 재보궐 선거 패배를 명분으로 당내 쇄신을 주장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비주류 측이 요구해왔던 집단지도체제 도입, 전당원 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주장이 대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보권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날 경우, 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 측이 기선을 잡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류 측에서는 현재의 대표 중심의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와 대의원 투표제 유지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빅 3' 움직임**=7·28 재보선 성적표는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등 민주당 최대 주주인 '빅 3'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당권 경쟁의 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빅 3'는 재보선 성적에 따라 정치적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손학규 전 대표의 움직임이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손 전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당권 구도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도에 비해 당내 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손 전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민주당 당권 구도는 요동칠 전망이다.

반면 주류의 정세균 대표와 비주류의 정동영 의원은 재보선 성적에 따라 전당대회 관련 행보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당권 주자 행보**=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효석 의원은 재보선 이후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한 가운데 '빅 3'와의 꾸준한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재보궐 선거 이후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물밑으로 전국을 한 차례 순회한 김 의원은 조만간 자서전 출판을 계기로 본격적인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당권-대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 의원은 당내 중도 세력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지지세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편, 목포 출신의 천정배 의원도 비주류 및 중도 성향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7·28 재보선 서울 은평을 야 3당 단일후보가 된 민주당 장상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진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했다"

주승용 "생활 아닌 생존… 한달이면 영양실조"

■ 극과 극 여야 의원들의 '최저생계비' 체험

여야 국회의원들이 쪽방촌에 머물며 최저생계비만 갖고 1~2일을 버티는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고 있으나 체험 소감은 완전히 상반됐다.

지난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체험을 끝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후일담을 통해 "3끼 식비로 6300원을 받아 쌀 1컵(800원), 쌀국수 1봉지(970원), 미트볼 한 봉지(970원), 참치캔 1개(970원)을 구입했다"며 "점심과 저녁은 밥에 미트볼과 참치캔을 얹어 먹었고, 아침 식사는 쌀국수로 가뿐하게 때웠다"고 말한 뒤 "또 970원 짜리 황도 한 캔을 사서 밤에 책 읽으며 음미했다. 이 정도면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먹거리로 쓴 돈 4680원을 빼니까 1620원이 남아 그 중에서 1000원은 사회에 기부했고 하루 밤을 잘 자고 난 다음날 아침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조간신문 1부를 600원에 샀다. 문화생활을 한 셈이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한 뒤 "국가 재정에도 한계가 있으며,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기를 접한 네티즌들이 "인스턴트식품만 먹고 사는 게 황제의 식사냐" "앞으로 계속 최저생계비로 황제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자 차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16일 똑같은 행사에 참가한 뒤 체험담을 통해 "용산구 동자동 쪽방 마을에서 하루 식비 6300원을 받아 쌀 2컵과 라면 2개, 계란 1개, 김치, 물 한통으로 3끼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현재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은 '생활'이 아닌 '생존' 수준이었다"면서 "빈곤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 의원의 발언과 관련, 27일 "내가 (식재료) 구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반찬 하나 놓고 밥에 물을 말아먹은 게 전부"라며 "한나절은 견딜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달만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월 한 달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을 진행중이며, 이날 현재 여야 의원 1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체험을 희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천정배·추미애·주승용·최영희, 민주노동당 강기갑·홍희덕·곽정숙,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체험을 마쳤고, 앞으로 한나라당 공성진,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김무성, 4대강 조정 의사 표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제 스스로 접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에 4대강 공사의 시기 조정 및 보와 준설, 예산집중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무조건 강행도 나쁘고 무조건 반대도 나쁘다'는 조정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정진석 추기경 면담시 '낙동강이나 영산강 사업 정도를 먼저 하면 어떠냐'는 정 추기경의 말에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며 원희룡 사무총장도 4대강 문제에 대한 검증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원내대표의 '조정'이라는 표현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정부와 당이 홍보, 설득,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연예인 동원 불법선거운동' 제보 조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7·28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예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접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과 가까운 개그맨 K씨가 최근 가수 P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뒤 P씨를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 등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인천 계양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 계양을 선관위는 이날 K씨와 P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을 동원해 돈을 줬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한 불법 기부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박주선·김동철 의원 개성공단 방문 통일부 반대로 무산

민주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남북정전협정 체결 57년이 되는 27일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으나 통일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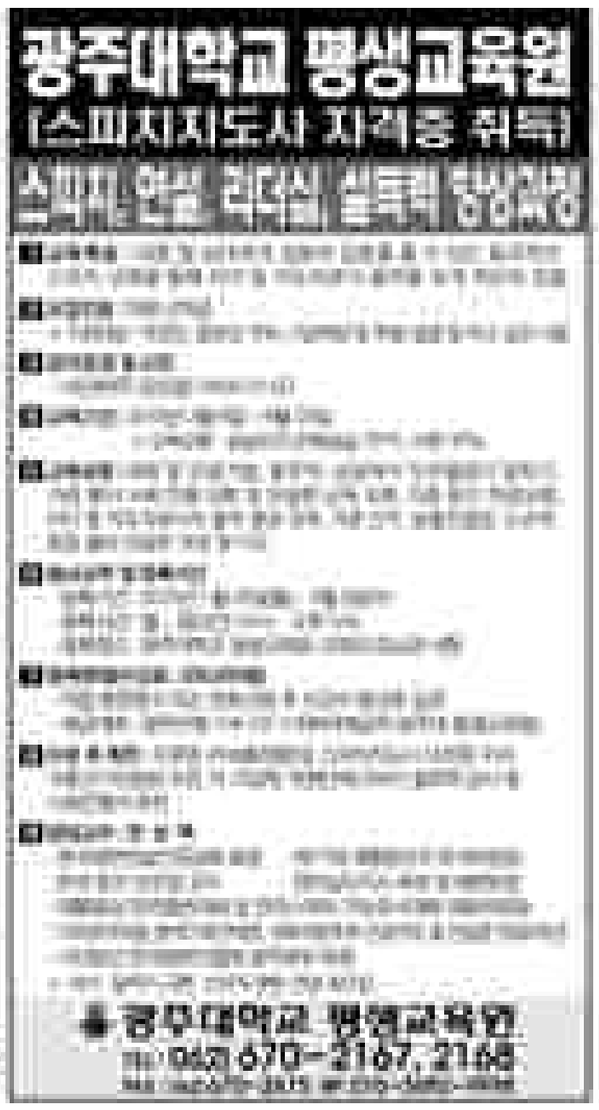
민주당 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천안함 사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이날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지만, 통일부가 "생산 목적 이외의 방북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방북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승인거부 행태를 보면 통일부가 아니라 '분단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천안함 사태의 해결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는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자감세 철회 법안 발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7일 최고세율 인하를 막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2% p씩 하향조정하기로 돼 있는 것을 변경, 2012년 이후에도 각각 22%와 35%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에어컨 개별소비세 부과해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27일 학교나 병원 등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스템에어컨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하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는 소비전력량이 면적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전력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냉장고·세탁기 등과 달리 시스템에어컨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시스템에어컨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증가하는 세수(연 최대 504억원)는 에너지 복지사업에 쓰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